
추가경정예산(안)

—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—

2022. 5.



기획재정부

Ministry of Economy
and Finance

목 차

I.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	1
II. 재정총량 변화	3
III. 주요 내용	4
[일반지출]	5
1. 소상공인 지원	5
2. 방역 보강	8
3. 민생·물가안정	9
4. 예비비 보강	12
[법정 지방이전지출]	12
IV. 향후 계획	13

I.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

① 추진배경 : 소상공인 지원 + 방역 소요 보장 + 민생안정 뒷받침

- ① 소상공인에 대한 **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** 추진
 - 손실보전금 +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
 -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해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
- ② **방역 소요 보장** 및 향후 **의료체계 전환** 뒷받침
 - 3~4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·치료·생활지원 등 방역소요 보장
 -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치료제 확보 등 지원
- ③ 고유가·고물가, 산불 등에 따른 **민생경제 안정** 지원
 - 에너지, 농축수산물 등 관련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
 - 특고,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·소득안정 지원
 - 동해안 산불 관련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및 재난 대응인프라 보장

② 기본방향 : 국채 발행없이, 59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*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조원 규모

◇ 고물가, 고금리 등 **거시경제 여건과 연계하여 인플레이 압력, 금리 파급효과 등이 최소화되도록 추경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검토**

- (**규모**) 59.4조원(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.4조원)
- (**내용**) ①소상공인·민생·방역 지원 등 36.4조원,
②지방재정 보장 23.0조원
- (**재원**) 세계잉여금·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.1조원,
지출구조조정 7.0조원, 초과세수 44.3조원*
- * 초과세수 53.3조원 중 44.3조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, 9.0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
- (**일정**) 5.12(목) 국무회의 의결 및 5.13(금) 국회 제출

※ [참 고] 추경안 재원조달 구조 및 총지출 변화

☐ 추경 재원조달 구조

구 분		비 고
①가용재원 발굴 8.1조원 * 세계잉여금, 한은잉여금, 기금 여유자금 등		추경재원 59.4조원
②지출 구조조정 7.0조원		
③초과세수 53.3조원	21.3조원 (일반지출 총당)	
	23.0조원 (지방이전)	
	9.0조원 (국채 축소)	

☐ 금번 추경에 따른 총지출 변화

현 624조원
(‘22.1회 추경기준)

금번 추경 +52조원

최종 677조원
(‘22.2회 추경)

교부세(금) 130조원		교부세(금) 정산분 +23조원*		교부세(금) 153조원
일반지출 494조원	+	일반지출 증액 +36조원	=	일반지출 523조원
		지출 구조조정 △7조원		

* 초과세수(53.3조원) 발생에 따른 법정 지자체 이전지출 소요(초과세수의 40% 수준)

Ⅱ. 재정총량 변화

□ **총지출** : 1회추경 624.3 → 2회추경 676.7조원 (전년대비 +118.7조원, +21.3%)

○ (**총지출**) 1회추경 대비 52.4조원* 증가한 676.7조원(전년대비 +21.3%)

* 지출 증액 59.4조원 + 지출 구조조정 △7.0조원

○ (**총수입**) 1회추경 대비 54.7조원* 증가한 608.3조원(전년대비 +26.0%)

* 초과세수 53.3조원,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 1.4조원

기타 가용자원(세계잉여금, 기금 여유자원 등)은 보전수입·내부거래로 총수입 증가 미해당

□ **재정수지** : 1회추경 △110.8 → 2회추경 △108.8조원(GDP대비 △5.2→△5.1%)

국가채무 : 1회추경 1,076 → 2회추경 1,067조원(GDP대비 50.1 → 49.6%)

○ (**관리재정수지**) △108.8조원으로 1회추경 대비 +1.9조원

(GDP대비 △5.2→△5.1%)

- 통합재정수지는 △68.5조원으로 1회추경 대비 +2.3조원

(GDP대비 △3.3%→△3.2%)

○ (**국가채무**) 1,067.3조원으로 1회추경 대비 △8.4조원* 감소

(GDP대비 50.1% → 49.6%)

* 국채 축소 △9.0조원, '21년 결산 및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등 반영

(단위: 조원)

	'21년		'22년			1회 추경 대비(B-A)
	본예산	추경	본예산	1회 추경(A)	2회 추경안(B)	
◇ 총 수 입 (증가율)	482.6 (0.2)	514.6 (6.8)	553.6 (14.7)	553.6 (14.7)	608.3 (26.0)	+54.7
◇ 총 지 출 (증가율)	558.0 (8.9)	604.9 (18.1)	607.7 (8.9)	624.3 (11.9)	676.7 (21.3)	+52.4
■ 통합재정수지 (GDP대비, %)	△75.4 (△3.7)	△90.3 (△4.4)	△54.1 (△2.5)	△70.8 (△3.3)	△68.5 (△3.2)	+2.3 (+0.1%p)
■ 관리재정수지 (GDP대비, %)	△112.5 (△5.6)	△126.6 (△6.2)	△94.1 (△4.4)	△110.8 (△5.2)	△108.8 (△5.1)	+1.9 (+0.1%p)
■ 국가채무 (GDP대비, %)	956.0 (47.3)	965.3 (47.3)	1,064.4 (50.0)	1,075.7 (50.1)	1,067.3 (49.6)	△8.4 (△0.5%p)

Ⅲ. 주요 내용

〈 추경안 전체 모습 〉

규모	59.4조원	
주 요 내 용	Ⅰ. 일반지출	36.4조원
	① 소상공인 지원	26.3조원
	■ 손실보전금(600~1,000만원 맞춤형 지원)	23.0조원
	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(보정률 90→100%, 하한액 50→100만원 등)	1.5조원
	■ 금융 지원(신규대출, 대환대출, 채무조정)	1.7조원
	■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	0.1조원
	② 방역 보강	6.1조원
	■ 방역소요 보강 (진단검사, 격리입원치료, 생활지원)	3.5조원
	■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(치료제 공급, 병상운영, 감염병 연구)	2.6조원
	③ 민생·물가안정	3.1조원
	■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(긴급생활지원금, 금융지원, 에너지바우처 등)	1.7조원
	■ 특고, 택시기사, 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	1.1조원
	■ 농축수산물,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	0.3조원
	■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	0.1조원
	④ 예비비 보강	1.0조원
Ⅱ. 법정 지방이전지출 (지방교부세·교부금 정산)		23.0조원

I. 일반 재정지출 : 36.4조원

1 소상공인 지원

26.3조원

- ◇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「**손실보전금(신규) + 손실보상 제도개선**」 패키지 지원
- ◇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**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** 지원 등 병행

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

+24.5조원

【 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(신규) : 23.0조원 】

-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·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, 손실보전금 600~1,000만원 지급

* 1·2차 방역지원금(100+300만원) 포함시 최대 **1,400만원 지원**

〈 손실보전금 개요 〉

- **(지원대상)** 소상공인·소기업 + 중기업(매출액 10~30억원)* **370만개**
* 매출액 10~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(0.74만개 내외 추정)
- **(지원금액)** ①업체별 매출규모 및 ②매출감소율* 수준을 지수화·등급화하여 최소 600 ~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
*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,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
-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, 매출 △40% 이상 감소 업종*,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~ 1,000만원까지 지원
- * 여행업, 항공운송업, 공연전시업, 스포츠시설운영업,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

(단위: 만원)

		①개별 업체 매출규모(연매출)						지원 대상
		4억원 이상		2~4억원		2억원 미만		
		기본	상향지원업종	기본	상향지원업종	기본	상향지원업종	
②개별업체 매출감소율	△60%이상	800	(1,000)	700	(800)	600	(700)	123만개
	△40~60%	700	(800)	700	(800)	600	(700)	61만개
	△40% 미만	600	(700)	600	(700)	600	(700)	186만개

- **(재정소요)** 23.0조원

【 ②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: 1.5조원 】

- (보정률)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→100% 상향('22.1월~, +0.5조원)

* (당초^{'21.7월}) 80% → ('22.1회 추경^{'22.1월}) 90% → ('22.2회 추경^{'22.5월}) 100%

- (하한액) 분기별 하한액도 50→100만원으로 인상('22.1월~, +0.7조원)

* (당초^{'21.7월}) 10만원 → ('22년 본예산^{'21.12월}) 50만원 → ('22.2회 추경^{'22.5월}) 100만원

〈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변화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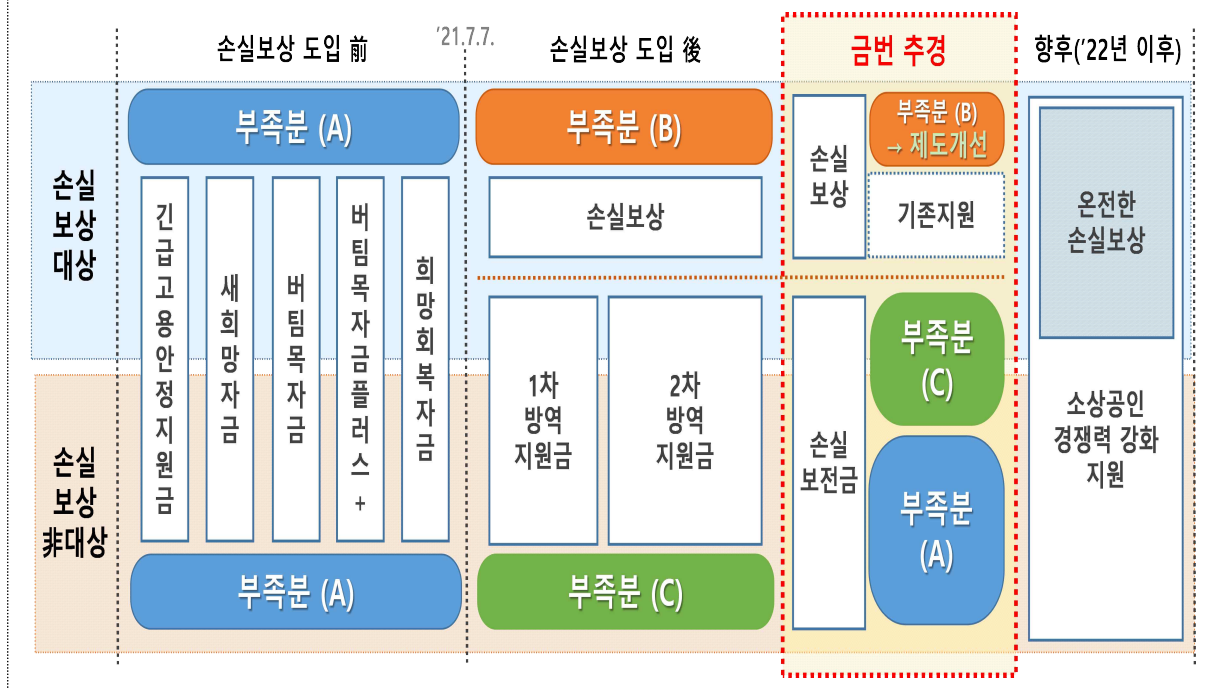
- (기본산식) ①일평균 손실액 × ②방역일수 × ③보정률(90→100%)

①일평균 손실액	×	②방역조치 이행일수	×	③보정률 (90→100%)
<div> <div>'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</div> <div>×</div> <div>'19년 영업이익률 + '19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(인건비·임차료) 비중</div> </div>				

- (하한액) 1분기 지급액 기준 50→100만원

- (재원확충) 2/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(+0.3조원)

〈 온전한 손실보상 체계도 〉



②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

+1.7조원

- **(신규대출)**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(신보·지신보 신규 0.2조원 출연)
- **(대환대출)**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.7조원 규모 융자·보증 공급(신규 0.8조원)
 - * **(低신용자)** 금리 12~20% 수준 →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(0.2조원)
 - * **(中신용자)** 금리 7% 이상 →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전환(7.5조원)
- **(채무조정)**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(원금·이자 포함) 추진(신규 0.7조원)

	①신규대출 (신보·지신보)	②대환대출		③채무조정 (캠코)	계
		융 자 (소진기금)	특례보증 (신보)		
금융지원 규모	3조원	0.2조원	7.5조원	30조원	40.7조원
(재정지원)	(0.2조원)	(0.2조원)	(0.6조원)	(0.7조원*)	(1.7조원)

* '23년 이후 2.9조원 수준 추가 출자 등 검토

③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

+0.1조원

【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(경영개선→재도전) 】

- **(경영개선)**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 확대(0.6→0.9만개사, 226→273억원)
- **(재도전)**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(업체당 100만원) 지원 확대(신규 5만개사, 500억원)

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】

- **(판로지원)** 모바일, 인터넷몰, 라이브커머스, V커머스, 홈쇼핑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*(905→1,128억원)
 - * 모바일 17,000→24,000개사, 인터넷몰 5,000→9,400개사, 라이브 5,000→5,400개사 등
- **(스마트화)**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(5,500→6,900개), 스마트공방(1,000→1,250개) 지원 확대(770→963억원)

- ◇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**검사·치료·생활지원** 등 방역 소요 보강
- ◇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**충분하고 다양한 치료제 확보** 및 **후유증·항체형성** 관련 연구조사, **병상확보** 추진

1 방역소요 보강

+3.5조원

- (**진단검사**)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 보강(0.6→2.2조원)
 - * 日 평균 진단검사 건수(만건) : ('21.11) 37 → (12) 54 → ('22.1) 45 → (2) 59 → (3) 65
- (**치료·생활지원**)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·입원치료비(0.2→0.9조원) 및 생활지원·유급휴가비(1.7→2.9조원) 지원소요 반영
 - * 日 평균 신규 확진자 수(만명) : (1월) 0.7 → (2월) 8.2 → (3월) 32.1

2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

+2.6조원

- (**치료제**) 처방대상 확대* 등에 따른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(100→200만개) 및 주사용 치료제(16→21만개) 추가 공급(1.3→2.1조원)
 - *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범위를 40세 → 12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
-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명분 신규 도입(신규 396억원)
- (**병상운영**) 확진자 급증에 따른 소요를 보강하고, 고위험군 중심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(2.1→3.8조원)
 - * 월평균 병상 가동률(%): (1월) 34.8 → (2월) 44.0 → (3월) 50.4
- (**감염병 연구**)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 사회 일반주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 실시(신규 38억원)
 -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추진(신규 55억원)

- ◇ 저소득 취약계층의 **생활 안정**을 위해 **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**, **에너지바우처 확대**, **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** 등 종합 지원
- ◇ **특고, 택시기사, 예술인** 등에 **최대 200만원** 고용·소득안정지원금 지급
- ◇ **생활물가 안정**을 위해 **농축수산물, 가공식품** 등 **생산부담 경감** 지원
- ◇ **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** 및 **재난대응 인프라 보강** 지원

1 긴급 생활안정 지원

+1.7조원

- (**긴급생활지원금**)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(4인가구) 생활안정지원금 지급(227만가구)
* 4인가구 지급액 : (생계·의료) 100만원 (주거·교육, 차상위·한부모) 75만원
- (**금융지원**) 저소득 서민, 청년·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(0.02→0.19조원)

<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주요내용 >

주요 내용	공급규모	재원소요
① (안심전환대출)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·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·고정금리로 전환 * 일반형(소득제한 無) : (한도) 5억원 (금리)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(소득 7,000만원 이하) : (한도) 25억원 (금리)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	신규 20조원 ('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)	신규 1,090억원
② (청년·대학생 소액금융) 미취업 청년,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* (한도) 1인당 1,200만원, (금리) 3.6~4.5%(보증료 포함)	+0.1조원 (現 0.2조원)	+150억원 (現 210억원)
③ (최저신용자 특례보증)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* (한도) 1인당 1,000만원, (금리) 15.9%(보증료 포함)	신규 0.2조원	신규 480억원

- **(에너지바우처)**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·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(0.14→0.23조원)
 - * **(지급대상)** (기존)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(87.8만가구) → (추가)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(+29.8만가구)
 - (지급단가)** (기존) 가구당 12.7만원 → (개선) 가구당 17.2만원(+4.5)
- **(긴급복지)** 재산기준 한시 완화*로 지원대상을 확대(+12만명)하고, 생계지원금도 131→154만원(4인가구)으로 인상(0.2→0.3조원)
 - * 주거용재산 공제신설(백만원) : (대도시) 69 (중소도시) 42 (농어촌) 35
 - 금융재산 기준 상향(4인가구 기준) : (현행) 933 → (변경) 1,112만원
- **(兵 급식비)**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,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 20% 수준 인상(1.1→1.3만원/日, 1.3→1.4조원)
- **(근로장학금)** 대학생들의 생활비·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규모 확충(11.5→13.5만명, 0.37→0.42조원)
- **(기초연금)**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(月 30.15→30.75만원)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보장(16.1→16.3조원)

2 특고·프리랜서 등 고용·소득안정 지원

+1.1조원

- **(특고 등)** 방과후강사, 보험설계사, 방문판매원 등 특고·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(70만명, 0.7조원)
 - * 20개 주요 업종(대리기사, 방문판매원, 방문교사, 보험설계사 등)
- **(택시·버스 기사)** 법인택시 기사,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(16.1만명, 0.3조원)
- **(문화예술인)**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(3만명, 305억원)

	특고·프리랜서	법인택시기사	버스기사	문화예술인
지원대상	70만명	7.5만명	8.6만명	3만명
지원금액	100만원	200만원	200만원	100만원

3 농축수산물,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

+0.3조원

- **(농축수산물)**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(1인당 1만원, 최대 20%) 지원규모 확대(590→1,190억원)
 - 비료·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(0.1→0.2조원)
 - 수입수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 및 민간 수산물 구매지원(용자)사업 확대(0.12→0.17조원*)
- * (정부) 비축사업 757→1,081억원, (민간) 수산물 구매지원 용자 458→658억원

	주요 내용	소요
농산물	■ (농가)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% 보조 * 국비 10%, 지방비 10%, 농협 등 60%	신규 600억원
축산물	■ (농가) 배합사료 구매자금 용자시, 이차보전(이자 1.1%p) 지원	신규 63억원
수산물	■ (정부·민간업체) 수입 수산물 비축물량 확대 및 구매지원 * 비축(정부): 1.3→2.0만톤 * 구매(민간): 5억원 × 40개 업체 ■ (어가) 어선어업 원양어업인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(0.5~1.0%p) 등	+527억원 +33억원

- **(가공식품)**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%를 국고 한시 지원(신규 546억원)
 - * 가격상승분('21.12월 대비)의 70%는 정부, 20%는 기업, 10%는 소비자 부담
 - 중소 가공식품 업계를 대상으로 원료매입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 공급 확대(0.11→0.15조원) 및 적용금리 인하
 - * **(지원한도)** 업체당 최대 50억원, **(금리)** 기존 2.0~2.5% → 조정 1.5~2.0%
- **(외식)** 외식업체들이 식자재 구매,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용자지원 확대(150→300억원) 및 적용금리 인하
 - * **(지원한도)** 업체당 최대 6억원, **(금리)** 기존 2.0~2.5% → 조정 1.5~2.0%
- **(핵심광물)** 주력산업에 활용되나, 중국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*에 대해 2개월분 비축(광해광업공단 출자 +376억원)
 - * 산화텅스텐 696톤, 마그네슘(괴) 1,140톤

4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

+0.1조원

- (피해복구)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, 산림복원 등을 위한 임도개량 등 산불지역 피해복구 지원(0.14→0.16조원)
 - * 대체작물 지원(400가구, 신규 40억원), 산불예방임도 정비(+100km, 1,382→1,603억원)
- 강원·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확대(600명, 5개월, 50억원)
- (산불대응)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, 진화장비·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(0.11→0.15조원)

- (장비) 산불진화차량 확충(+59대, 19→36억원),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도입(9대, 신규68억원), 산불특수진화대 출동 지원(33대, 신규1억원), 산불진화장비 보강(435명, 5→9억원),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장착(10대, 신규84억원)
- (예방·인프라) 산불예방 숲가꾸기 확대(+5천ha, 171→266억원), 산불 인화 물질 수집(504→560억원), 산불특수진화대 처우개선(초과수당 8억원)

4 예비비 보강

1.0조원

- 코로나 재확산,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·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 1조원 추가 확보

Ⅱ. 법정 지방이전지출 : 23.0조원

- 금년 초과 세수(53.3조원)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(금) 2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뒷받침

구 분	'22 예산(A)	추경(B)	합계(A+B)
■ 지방교부세*	65.1조원	+12.0조원	77.0조원
■ 지방교육재정교부금**	65.1조원	+11.0조원	76.0조원

* 내국세의 19.24% + 종부세 전액 등 ** 내국세의 20.79% + 교육세 일부

IV. 향후 계획

① 국무회의 : 5.12(목)

② 추경안 국회 제출 : 5.13(금)

③ 국회 심사 : 정부안 제출 후 상임위 등 심의 일정 여야 협의

-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,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